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998. 8

총 일 부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3대 원칙으로 설정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번 8월 15일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에서 밝히신대로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본 자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통일부가 추진해 온 일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자료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1. 남북대화 재개 노력
2.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
3. 남북사회문화 교류 확대
4.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노력
5.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7. 경수로사업의 체계적 추진
8.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

부 록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 남북대화 재개 노력

가. 남북대화 추진현황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남북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지 3년 9개월만인 지난 4월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대표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남북대화 와 4자회담을 병행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남북 직접대화에서는 남북 화해, 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지난 3월 제2차 4자회담을 개최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실현을 위해 당국간 대화 제개는 물론 어떤 계기도 남북간의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틈새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남북당국대표회담

남북당국대표회담이 '98. 4. 11~17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비료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요구한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북한측의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비료지원과 병행하여 우선적으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 및 남북특사교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료만 지원받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구체적 합의없이 뒤로 미루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측 입장 때문에 남북당국대표회담이 비록 아무런 결실없이 종료되었지만, 북한측에 대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효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측은 회담을 통해 합의만 존재하고 실천이 따르지 못한 과거의 비생산적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특히 「정경분리」의 의미, 「상호주의」 원칙 등을 북한측에 확실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전기를 이룩하였다.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3차 대북구호물자 전달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98. 3.25~27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측은 우리의 대북지원이 부대조건과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측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과거 1~2차 지원의 연장 선상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의 합의서 작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적십자사 차원의 대북지원은 전적으로 민간 단체들의 기증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 기증단체들이 구호물자 분배 결과 확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쌍방은 분배결과 확인문제를 둘러싼 이견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거듭한 끝에 밀가루를 기본 품목으로 하여 1~2차분과 같은 수준의 규모(옥수수 기준 5만톤)를 1998년 5월말까지 인도·인수키로 하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제3차분 대북구호물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제5차 접촉에서는 분배결과 확인시 북한지역에 있는 국제적십자연맹 현지 대표들이 연맹 구호대상 지역 이외의 1~2개 지역을 선정,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므로써 그동안 북한측의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분배결과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제2차 4자회담

제2차 4자회담은 '98. 3.16~21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 문제 합의를 위한 2개 분과위(「평화체제」, 「긴장완화」) 구성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다면 4자회담에 흥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토의 과정에서 4자간에 「1개 분과위」를 먼저 구성하고 CBM(신뢰구축), 법률적문제, 장기적 조치 등을 세부사항으로 논의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분과위원회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 및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실천을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이는 ‘남북 당사자간 해결구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 시키는 기본틀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분야별 부속합의서 기본이행방안 △부속합의서 조항별 세부실천방안 △남북대화 세부협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과 직제개정에 따라 남북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핵통제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 우리측 대표단 개편작업도 마무리 하는 한편,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 ‘회담운영·지원 표준 지침’도 마련하였다.

또한 판문점 「자유의 집」을 신축('98.7.9)하여 남북회담·접촉·교류시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서는 남북이산가족면회소, 남북우편물교환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내에 「남북회담연구회」를 발족, 과거 협상사례를 분석하고 협상전략·전술을 개발하는 등 회담 실무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향후 남북대화 추진방향

정부는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의 장진」이라 할 수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이미 합의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를 일거에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서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는 남북당국간 상설대화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쌍방 최고 당국자간에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특사의 파견 또는 교환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 과제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도 민간의 성금기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또한 남북당국간 대화와 동시에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장기적 구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개방·개혁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2.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

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간다는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의 주요내용>

□ 기본방향

-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 정부는 과당경쟁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

□ 조치내용

- 접촉·방북
 - 방북요건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 적용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
(1년 → 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촉(20일 → 15일), 방북(30일 → 20일)

○ 교역

-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 품목」 확대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경제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 협력사업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등

나. 추진현황

교역

정부가 남북교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지만 남북교역은 크게 감소하였다.

'97년 3억 800만달러에 달했던 교역규모는 금년 들어 지난해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8 상반기 교역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98. 1~6	'97. 1~6	증가율
반입	31,991	97,058	-67.0%
반출	45,816	48,358	-5.3%
합계	77,807	145,443	-46.5%
교역수지	13,825 (-1,661)	-48,700 (-63,783)	

* ()는 지원성 반출(대북지원, 경수로사업 등)을 제외한 실질 교역수지

이와 같이 남북교역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환율상승과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교역여건이 악화되어 북한물품의 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97년 상반기중 총반입의 35%를 차지했던 금괴가 국내의 “금모으기운동” 등으로 전혀 반입되지 않았고, 아연괴 등 철강금속제품의 반입도 지난해의 1/5 수준에 머물렀으며, 농림수산품의 반입도 41.6%나 감소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교역을 통해 '91년부터 '97년까지 7년간 연평균 1억 4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아왔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166만달러의 흑자를 보는데 그쳤다.

협력사업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사업자」는 5건을 승인하고, 대북투자의 최종사업 승인인 「경제협력사업」은 3건을 승인하였다.

<새 정부 출범후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기 업	사 업 내 용	승인일
◆미홍식품	수산물 채취·가공	'97. 5.22 ('98. 3.13)
안성개발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98. 3.13
◆두레마을영농조합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	'98. 4. 8 ('98. 7.27)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 시험재배 및 공동 연구	'98. 6.18 ('98. 6.18)
(주)현대상선, 현대 건설, 금강개발산업	금강산 관광사업	'98. 8.6
(주)세원 커뮤니케이션	제13회 아시안게임 북한 올림픽위원회 스폰서십 대행	'98. 8.6

주)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사업, ()는 협력사업
승인일

또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허용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4.30)에 따라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졌으며,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옥수수재단의 「다수확 옥수수 품종개량을 위한 시험재배」와 두레마을영농조합의 「나진합작농장 운영사업」 등 2건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 경험 협의를 위한 기업인 방북의 길을 넓히고, 경험사업에 대해서도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IMF 사태 등 우리 기업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실제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남북경협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남북경협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유희설비의 대북 반출을 통한 위탁가공교역 확대, 남북 직교역 확대를 위한 당국간 협의 여건 마련 등을 통해 IMF 상황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감안할 때 남북간 경협의 여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국내경제 여건이 다소 호전되면 남북경협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문화교류 확대

가. 추진현황

「국민의 정부」 출범후 6개월 동안의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학술, 문화·예술, 종교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사회문화분야 주요 교류사례>

<성 사>

- 성균관대, 북한대학과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의차 방북(4.28~5.5)
 - 북한의 고려성균관과 자매결연(5.3)
-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5.2~12)
-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북한지역 천주교 유적지 조사(5.15~22)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북한지역의 문화유적 답사(7.7~21)
- 경향신문, 한민족문화네트워크 구성협의차 방북(8.4~11)
- 중앙일보, 남북언론·문화교류 협의차 방북(8.22~29)
- 동아일보, 금강산 등 개발계획 취재(8.25~9.5)

<추진중>

- 21세기통일봉사단, 통일문제학술토론회 추진
- 민족통일선교협회, 북한교회 실태파악 추진
- 가나아트갤러리, 북한미술품 서울전시 추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새 정부 들어 예비단계인 「협력사업자」 승인 6건, 최종단계인 「협력사업」 승인 5건이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는 '91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승인건수의 2/3에 해당된다.

<새 정부 출범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사 업 자	사 업 내 용	승인일
◆연변과기대후원회	나진과기대 건립·운영	'98. 1.9 ('98. 6.5)
문화방송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	'98. 3.13
◆한민족복지재단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98. 4.8 ('98. 6.5)
◆한국사진학회	남북 사진진 및 사진집 발간	'98. 4.29 ('98. 4.29)
◆스포츠아트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	'98. 4.29 ('98. 4.29)
◆한민족문화네트워킹연구소(경향신문)	대북 문화정보화사업	'98. 5.11 ('98. 6.20)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북한 명산 및 역사적 명승지 탐방 관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98. 8.6

주)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 ()는 협력사업 승인일

이와 같이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새 정부의 진향적 대북정책과 우리 사회문화계의 적극적인 남북 교류 의지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경우 우리측의 순수한 교류의 지에 대해 북한측이 통일전선전술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하지 않고 있다.

나. 향후 추진방향

“보다 많은 접촉·대화·협력”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적극 허용·지원해 나가면서 남북당국간에도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노력

가. 추진현황

새 정부는 고령화되고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 및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하고, 4.11~17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당국 대표회담에서도 이산가족면회소·우편물 교환소 설치 및 이를 위한 생사·주소확인을 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 당국간 또는 적십자간 합의에 의한 교류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기반도 정비해 나가고 있다.

첫째로 금년 4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산가족들에 대한 교류 소요경비 지원을 시작했는 바, 생사·주소확인 주선 사례비 40만원 내외, 상봉 주선사례비 80만원 내외, 제3국 여행경비 60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금년 5월 28일에는 22개 이산가족 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한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가 발족되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동 협의회는 향후 이산가족문제 해결과정에서 민간의견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정책건의 등을 통해 민간·정부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로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규제없이 방북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로 이산가족 관련자료의 통합·전산화를 통해 이산가족찾기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이산가족교류 본격화시 폭주할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설치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 1/4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현재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며, 기존 이산가족 관련 자료 약 5만5천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주소·연락처 확인작업을 이미 완료했다. 금년 9월중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발족시키고 이산가족 신규등록 접수도 시작할 계획이다.

나. 이산가족 교류현황

올해들어 새정부의 이산가족문제 최우선 해결의지 표명과 남북 당국 대표회담(4.11~17, 북경), MBC를 비롯한 방송사의 이산가족 특집방송 등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이 금년 8월 20일 현재 3,266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761건의 4.3배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이산가족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 현황>

(단위: 건)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20현재)	계
건수	1	62	275	267	743	651	311	231	761	3,266	6,568

한편 금년들어 교류성사율도 대폭 증가했는데, 생사확인인 경우 금년 8월 20일 현재 219건이 성사되어 지난해 전체건수인 164건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의 상봉도 46건이 성사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1.9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산가족 교류 성사 현황>

(단위: 건)

연 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8.20현재)	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230	1,244
재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46	201

다.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당국간 또는 직십자간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해서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산가족이 생사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 및 고향 방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산가족 관련 법령정비,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발족 등 내부기반도 조기에 확충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5.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가. 추진현황

새 정부는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정부차원에서는 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민간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남북적십자간 직접지원

새 정부 출범 후 3.25-27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5차 대표 접촉의 합의에 따라 제3차 대북지원이 4월~5월간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불 상당(옥수수 기준 5만4천여톤)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3차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경로 외에, 정주영씨측의 한우 500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고(6.16), 국제적십자 요원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문제가 개선되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정부는 UN기구의 제4차 대북지원계획 참여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을 결정하고, 3월 9일 WFP를 통해 1,100만불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이 된다. 이중 8월말까지 밀가루 1만톤, 옥수수 2만톤이 전달되었고, 잔여분 옥수수 1만톤은 9월초 이후 전달 예정이다.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확보

북한에 지원된 물자에 대한 전용 의혹은 대북지원이 시작된 '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에 열린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시 우리측의 요구로 북측은 대회 물자전달 20일 이내에 도·시·군 등을 명시한 구체적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제적십자연맹 요원의 분배결과 확인(1-2개지역)도 약속하였다. 이후 3차지원시 북측이 이를 이행함으로써, 분배의 투명성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대북지원 실적>

구 분	우 리		국 제 사 회	
새정부 출범이전 (’95.6~)	정 부	2억 6,242만불	UN기구	1억 7,186만불
	민 간	2,229만불	개별국가	1억 7,273만불
	소 계	2억 8,471만불	국제NGO	7,201만불
소 계			4억 1,660만불	
새정부 출범이후 (’98.3~ 8.20)	정 부	1,100만불	UN기구	9,258만불
	민 간	953만불	개별국가	7,544만불
	소 계	2,053만불	국제NGO	1,206만불
소 계			1억 8,008만불	
총 계	3억 524만불		5억 9,668만불	
비 고	옥수수기준 190.7만톤		옥수수기준 372.9만톤	

* 국제사회 지원실적에는 우리측 기여분 제외

나.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새 정부는 우리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3월 18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내용>

- 민간단체 대북지원 참여 확대
 -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참여 허용
 - 대북지원 협의·모니터링 목적의 접촉 및 방북 허용

-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 완화
 - 자선음악회·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
 - 언론사·기업체의 모금행사 협찬 및 무기명기탁 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3.18조치」에 따라 이후 실시된 적십자 대북지원시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6개단체 6명이 구호물자 인도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3개단체 5명이 대북지원 협의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4.25) 등 행사시 언론사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다.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 대북지원은 우리의 지원사실을 북한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간 직접지원 구도를 정착시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1회성 지원보다 영농자재 지원 등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갈 방침인 바,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민간차원의 지원은 남북주민간 접촉을 증대하고 민간의 희망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북한에 지원된 물자의 분배투명성 확보수준, 남북관계 진전상황 등을 고려, 창구 다원화 등 민간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적십자 및 UN기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물자의 전용 방지와 분배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주민의 탈북은 '94년을 기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 '97년도에는 86명, 올해에는 7월말까지 40명이 입국하였다. 이로써 현재 71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의 신분이 다양화되고 가족을 동반한 집단이탈도 증가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국내입국을 희망하고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현황

새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이미 제정('97.7.14)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시점부터 우리 사회에 적응·정착하는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1년 정도 정착 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거치는 등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보호·지원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안정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적응·정착에 필요한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의 협조하에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이 후원회를 중심으로 종교·여성·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결연사업, 심리상담 등의 지속적인 사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실적('98.3~8.20)>

지 원 내 용	지원실적	지원금액
○신분안정지원 - 보호결정 - 취직·주민등록 지원	42명 42명	
○생활안정지원 - 정착금·보로금지원 - 주거지원 -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31명 30세대 30세대	566백만원
○자립자활지원 - 학력인정 및 교육지원 - 자격인정 및 취업지원	98명 5명	78백만원
○교육·훈련지원 - 사회적응교육 실시 - 직업훈련 실시	24명 31명	28백만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관련회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사회 및 각종행사	15회 각 4회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기금 475백만원 적립

이같은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중 생계곤란자 및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파악 및 실질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방향

내년 상반기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이 완공되면 이 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체계, 각종 운영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교육·훈련실시 경험에서 나온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조기적응·정착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같은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우리사회로의 안정적 편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위로행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해결해 주는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7. 경수로사업의 체계적 추진

가. 추진현황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다.

새 정부의 이러한 기본입장의 천명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정부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미·일간의 국제적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수반되는 남북간 접촉과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지준비공사 마무리

작년 8월 시작한 부지준비공사를 당초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금년 7월에 종료하였고, 현재는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작업물량의 1/6에 해당되는 부지정지 작업을 마쳤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숙소 및 식당, 테니스장, 의무실, 체력단련실 등 생활편의시설도 마련하였다. 또한 위성TV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외 주요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분담 협상 타결

'97년말 이후 한·미·일·EU 등 KEDO집행이사국은 경수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한 재정분담 협상을 진행하여 금년 7월말 타결되었다. 우리측은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의 70% 부담을 약속하였다. 경수로사업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지원되는 '한국표준형 원전'은 주계약자인 한전을 통해 건설되며, 우리측이 부담하는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이 근로자 인건비 및 자재비 등으로 국내시장에 환류되도록 하여 고용창출 및 내수확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향후 추진방향

본공사 개시

한전과 KEDO간 주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면 현재 진행중인 부지준비공사가 끝나는 금년말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일시에 8,000~10,000명의 남북 근로자들이 어울려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후속협상 지속 추진

정부는 KEDO와 북한간 예정된 후속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동행, 통신 등 6개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훈련의정서』, 『인도일정의정서』 등 나머지 7개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추진과 함께 북한의 핵동결 관련 의무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경수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무궁화위성을 통한 남북간 통신망 구축, 남북간 경제적인 통행로 확보, 근로자들의 휴양지 방문의 범위 확대 등 기존의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간 '화합의 장'으로 조성

정부는 경수로건설현장이 '남북 근로자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근로자가 대규모 공동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서로간 이해와 신뢰가 쌓여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8.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

가. 추진현황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추진」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정책자문기구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설명회, 강연회, 정책설명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정부입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내에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단체들이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기반위에서 통일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발족을 지원해 왔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의 통일부 편입을 계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여론 수렴, 자문활동 그리고 국내외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되었다.

대국민 홍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먼저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과 차관이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6개월 동안 장관과 차관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강연회나 설명회는 무려 80여회에 달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진보·보수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전국 27개 권역별로 개최된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하여 여론선도층인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지역유지 18,000여명에게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정경분리」, 「상호주의」,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해설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민주평통 신문」을 통해서도 대북정책 추진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통일관련 프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독교방송(CBS) 등에 통일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하여 일반국민들이 통일문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다.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변 확대를 꾀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PC통신을 통한 「진자공청회」(1차: 5.1~31, 2차: 7.20~8.14)를 개최하여 정부와 국민이 가상공간에서 직접 대화하는 쌍방향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인터넷 통일부 홈페이지인 「UniKorea」를 보강 개편(8.15)하여 최신 대북정책 현안관련 자료들을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영문자료를 제작,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정보 자료공개 확대 차원에서 전국 11개 도시에 북한관을 운영중이며, 금년에는 북한영화 상영을 대학구내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늘의 북한실상을 실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최신 북한교과서 92종 124권을 수집하여 전국 순회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한 해외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리랑 TV의 「Eye on North Korea」에 통일칼럼을 고정편성하는 한편 영문 News Letter인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창간(7월)하여 방한 외국인과 해외저명 인사 및 언론에 대해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통일후계세대들의 올바른 대북관 정립을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방의 초·중·고 교장 및 윤리담당교사 6백여명을 대상으로 「통일강좌」를 개최하고, 「중·고교생 대북정책 설명회」를 전국 1,062개교 64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부정책 이해제고를 위해 「교민초청 설명회」와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를 미주(8.5~8.17)·동남아(7.27)·대양주(7.29~31) 등지에서 개최하였으며, 동포 2세들의 통일관 정립을 위해 「재외동포 대학생 국내 초청연수회」(6.29~7.4)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수렴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못지않게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부에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11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표 참조)

<'98 여론조사>

구분	일시	대상	주요내용
1차	'98.2.25	일반국민 1,000명	○ 대통령 취임시 통일분야 - 대북3원칙에 대한 93.8%가 공감 - 정경분리에 입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92.3%가 찬성

구분	일 시	대 상	주 요 내 용
2차 ~ 4차	4. 8, 4.14, 4.21 (3차례)	민주평통 모니터요원 100명	○남북당국대표 회담 관련 - 회담결렬의 책임은 북한측 (74.1%)에 있다는 의견 - 우리측의 상호주의 원칙 견지 에 대해 91.4%가 적절하다고 평가
5차	4.22	일반국민 500명	○남북당국대표회담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우리측의 상호주의 원칙 견지 에 대해 70.9%가 적절하다고 평가 - 북한측의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66.2%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6차	6.27	민주평통 모니터요원 100명	○북한잠수정 침투사건 관련 - 잠수정사건에 대해 86.2%가 명 백한 도발행위로 인식하고, 정 부의 초기대응자세에 87.6%가 적절하다고 평가 - 동 사건의 해결책으로는 72.5% 가 판문점 군사대화를 통한 방 법 제시 - 향후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대 해서 78.8%가 기본골간을 유지 하면서 상황에 따라 신축적 대 응 지지

구분	일 시	대 상	주 요 내 용
7차	6.28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잠수침투사건 관련 - 동 사건의 해결방안으로는 61.6%가 판문점 군사대화를 통한 방법 제시 - 향후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대해서 52.6%가 기본골간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신축적 대응 지지
8차	6.17~ 7.11	민주평통 자문위원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주의원칙 관련 - 정부의 상호주의원칙 적용에 있어 95.9%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
9차	7.14	민주평통 모니터요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 관련 - 무장침투사건의 배경은 대다수 (56%)가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 -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86.8%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포용정책' 으로 인식 -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93.4%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햇볕정책을 지속 해야 한다는 의견

구분	일 시	대 상	주 요 내 용
10차 ~ 11차	8.16 ~ 17	일반국민 1,500명 및 민주평통 모니터요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축사중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구시적인 실천방안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72.6%, 모니터요원 91.7% ○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7.8%, 모니터요원 91.7%가 보다 유화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

이와 함께 통일부에서는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 「정책자문회의」(정책·회담·정보·교류협력 등 6개 분과)와 민주평통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11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남북관계 현안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북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각 분야의 원로인사 29명으로 새로 출범한 「통일고문회의」를 비롯한 이들 여러 자문기구들은 내실있는 운영으로 통일정책 수립업무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결성 지원

정부는 정당 및 모든 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결성하여 국민의 통일의를 결집하고,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및 공동행사 등에 대처하는 등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약칭: 「민화협」)의 결성을 지원하여, 지난 8월 5일에는 여야 정당을 포함, 43개 정당·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민화협」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민화협」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민간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구심체로서 향후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합의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울러 「민화협」은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남북교류협력 등을 통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향후 추진방향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에 주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조사와 각종 자문회의체를 통해 일반국민,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각종 강연회·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전국 232개 지역협의회에서는 9월과 10월중 「정부 대북정책 특별홍보기간」을 설정, 각종 대국민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대북정책을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VTR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방향 뿐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리는 일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95, '96 여론조사시 통일을 안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30%내외)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통일교육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 대북정책 목표

-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현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

2. 대북정책 3대 원칙

-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조치
 -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② 흡수통일 배제

- 남북간 평화공존을 통한 「남북연합」 실현
- 단계적 평화통일 추진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 북한 스스로의 변화노력을 지원
-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민족진체의 복리증진

3. 대북정책 추진기조

①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 안보태세는 확고히 유지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은 유연성 발휘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 상호 체제인정·존중으로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
- 교류협력 활성화로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북한의 점진적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
-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
 - ※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

④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 민족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자세로 추진
-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민족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추구

⑤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 모든 남북간 문제는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
- 남북대화화 4자회담 병행 추진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정책추진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자세 유지

4. 대북정책 추진방향

①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
-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쌍방 최고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사교환 추진
-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를 가동, 합의가능한 분야부터 이행

②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
-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우선 추진
- 기업인 방북 확대, 투자규모 상향 조정, 경험절차 간소화 등 활성화 조치

③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인도주의 정신을 감안, 남북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 방북절차 간소화 및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적극 추진

④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단력적으로 제공

-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남북농업개발 협력 및 경험 활성화를 통해 근원적 해결노력 지원
- 민간차원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지속적 강구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원칙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

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시범사업 및 국제적 약속 이행차원에서 성실히 추진
-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방안 강구

⑥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은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4자회담」도 활용하여 추진
-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안보협력체」구성 추진
-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의 미·일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지원